

지방정부 노동 정책에 ‘작은사업장 노동권’ 새겨넣기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위원장

용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입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번 선거에서도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공론장 주변부로 밀려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일과 삶을 꾸려나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늘 뒷전인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토건(土建) 위주의 개발 공약만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미숙: 정말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나 일자리 확대에만 매달려 왔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렇게 선거 때마다 비슷비슷한 말 잔치가 계속되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전환

용현: 그런 와중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에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역할로만 여겨졌던 ‘노동권’ 문제를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미숙: 네. 보통 지자체의 노동 정책은 경제나 기업 지원 부서에서 부수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민주노총은 이 구조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노동 행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작 지자체들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초 체력’이 너무 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이나 실 단위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구조화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용현: 권한만 넘겨받고 제대로 된 관리나 보호 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노동환경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군요. 민주노총 요구안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진 공간이 바로 ‘산업단지’이더라고요. 이곳 안산만 해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라는 거대한 노동 현장이 밀집해 있잖아요?

미숙: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76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자체가 산단을 조성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정작 인프라나 환경 개선 계획을 세울 때 그곳에서 종일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게 민주노총의 지적입니다.

용현: 생각해 보면 산단 관련 정책은 늘 ‘기업 유치’나 ‘첨단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네요.

미숙: 그렇죠. 게다가 산단 입주 기업들의 평균 고용 인원이 20인 미만입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보니 개별 기업 차원에서 노동조건이나 복지를 개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장시간 노동 같은 노동법 위반에도 훨씬 쉽게 노출되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지자체가 나서서 산단 내 공용 휴게실이나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만들고, 산업단지 정책 심의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역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 지방정부의 ‘선택’ 아닌 ‘의무’

용현: 산단이 낡고 부실해지면서 불거지는 안전 문제 역시 심각하잖아요. 유해화학물질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미숙: 그 부분도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노후 산단의 안전 대책, 특히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지원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전국 6개 산단, 고작 11명에 불과하거든요. 지자체가 주도해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노후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현: 결국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데,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요구안을 더 들여다보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많더라고요.

미숙: 네. 이동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요구가 담겼습니다. 먼저 배달, 대리운전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길거리나 편의점을 전전하지 않도록 쉼터와 개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역 사회 일자리

의 큰 축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용현: 특히 최근에는 농어촌이나 지역 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미숙: 맞습니다. 지자체가 도입 주체인 계절근로제도에서 브로커 개입이나 인신매매성 착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은 ‘인신매매 방지법’에 명시된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지자체에 즉각 설치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공공 기숙사 건립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 미등록을 떠나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도 촉구했구요.

용현: 지역 소멸 위기와 맞물려서 ‘성평등 노동 정책’을 강조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미숙: 네, 지자체의 기존 정책들은 여성을 ‘가족 구성원’이나 ‘돌봄 제공자’로만 한정 짓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결국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평등 고용 공시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고용평등감독관을 두는 등 지자체가 나서라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용현: 지자체 소속이나 위탁 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는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고 하죠?

미숙: 네. 여전히 전국 지자체의 절반가량은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지역도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아예 배제하기도 했어요. 적용 범위도 지자체 직접 고용 노동자로 좁게 한정하고 있어서, 용역이나 위탁, 하수급 업체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야기를 나눠 보니, 이번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요구안은 결국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곧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다”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고용 형태나 성별,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사업장 규모로 차등 되지 않는 쉼 권리의 온전한 보장, 이 당연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지역 정치의 ‘선택’이 아닌 ‘의무’여야 합니다. 



▲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 FM <월담의 노동it수다> 73회 “작은 사업장에 없는 아프면 쉼 권리” 방송 듣기